

현행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희(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조성혁(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모든 소비자들은 일생을 통해 수없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이용하며,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들은 많이 있지만, 표시와 광고를 중요한 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문제의 대부분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문제와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 및 관련법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후속 실증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의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최근 각종 위법사례들을 통해 발견한 현행 표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시·광고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제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제도, 표시·광고 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부당한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법 제3조의 내용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제도”가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내용은 1999년 7월 제정 후 최근까지 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유형이나 기준의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식품을 비롯하여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표시 사례 등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부당한 표시(정보)를 이용하여 판매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정보로서의 표시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인식과 태도의 미흡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표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소비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시·광고 매체 환경이 변화되고 기존의 법과 제도로써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부당표시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 문제와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소비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장 환경의 글로벌화, 정보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표시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여 현행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광고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행 관련법과 제도의 이러한 문제점들과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선진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적 제안과 소비자 교육적 지향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은경·여정성(200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방안 연구, 소비자학연구, 18(2), 1-21.
- 김성숙(2010). 소비자의 쇠고기 안전관련 표시 이용 행동. 소비자문제연구 제37호.
- 김성용·이정희(2010).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대한 영양표시 이용의 효과 분석. 소비자학연구 21(3).
- 배순영·김민아(2012). 일본의 소비자문제 및 소비자정책. 한국소비자원 정책자료 12-01, 131-146.
- 송민수·정용수·박희주·정연희(2011).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기향성 연구(Ⅲ).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1-10.
- 여정성(2008), 중요정보고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조성국(2009)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논문집, 33(1), 171-194.
- 최신애·여정성(2010). 소비자정책으로서의 표시·광고규제 성과 평가. 소비자학연구21(4).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추고쿠신문(2013). 일본, 식품표시신법안 각료회의에서 결정 '회수명령 위반 시 벌금 3억엔'
<http://www.chugoku-np.co.jp/News/Sp201304050070.html>)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